

2013년 국가직 9급공무원 채용시험(재책형)

아모르이그잼 행정법 대표교수 강태월

1.

정답 ③

해설

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,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. 따라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하여 행정청과 사이에 행정처분에 부가할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으나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.[대판 2005다65500]

2. ①

해설

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,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으로 '저촉사항 없음'이라고 기재 한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다.[대판 2006.6.9, 2004두46]

3.

정답②

해설 : 행정절차법은 총칙, 처분절차, 신고절차, 입법예고절차, 행정예고절차, 행정지도절차,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. 행정계획확정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다.

4.

정답 ④

해설 :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해당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확약의 처분성을 부정한 바 있다. 따라서 처분의 효력으로서 공정력이나 불가쟁력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아니한다.

5번

정답 ①

해설

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'도로교통법 제44조

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' 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. 12. 9.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(2011. 6. 8.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.[대법원 2012.11.29, 2012도10269]

6번

정답 ③

해설

① 3자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원고적격 있음

② 과거 판례는 즉시확정이익설에 따라 다른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소송형식이 있다면 무효등확인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 보충성을 요하였다. 그러나 08년 판례 변경으로(대판 2008.3.20, 2007두6342) 인하여,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직접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률상 이익을 취하고 있으므로 보충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.

④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,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. [대법원 2008.7.10, 선고 2007두10242 판결]10. 국가9급

7.

정답 ②

해설

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[별표 6]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 →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임 08. 경기9급 / 09. 국회8급 / 11. 지방9급

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, 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[별표 6]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·사회적 비난 정도·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·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며 상한액의 2배인 16,000,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.[대판 2001.3.9, 99두5207]

8번

정답 ④

해설 :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이라도 상대방인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공권력 행사라면 처분성을 인정한다.

■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는 처분성 인정 ■ 04. 행시 / 09. 세무사

행정규칙에 의한 '불문경고조치'가 비록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에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

동안은 장관표창이나 도지사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.[대판 2002.7.26, 2001두3532]

* 행정규칙에 근거한 행위라도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,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

9번

정답 ②

해설

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, 제소기간, 간접강제규정을 준용한다. 그러나 법집행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아니므로 집행행정지신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, 사정판결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.

10번

정답 ③

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(대판 1997.7.11, 97다7608) 08. 지방9급 / 12. 지방7급 즉, 처분이 취소되어 직무집행이 위법하더라도 고의 과실은 별도로 입증해야할 문제이다.

11번

정답 ③

해설 : 불법의 영역에서 평등을 주장할 수 없듯이 위법한 선례에는 자기구속이 배제된다.

12번

정답 ④

해설 : 안행부장관은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청이지 행정주체는 아니다.

13번

정답 ②

해설 : 변형된과징금의 사례로 볼 수 있다.

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(과징금 처분) ①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, 대외적인 신용·고용·물가 등 국민경제,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14번

정답 ①

해설

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외국인의 강제출국조치는 직접강제 사례이고 소방활동종사명령(소방기본법 제24조), 물건의 폐기·압수(식품위생법 제24조),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(마약류

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), 마약류폐기 등은 즉시강제 사례로 볼 수 있다.

15번

정답 ④

해설

처분의 취소판결이 없더라도 국가배상 담당 법원은 별도로 처분의 위법을 확인하여 배상 결정을 할 수 있다.

16번

정답 ②

해설

■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으며 다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■

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,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롭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.[대판 1996.6.14, 96누754]

17번

정답 ③

해설

원칙적으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(동법 제67조 제2항)

18번

정답 ①

해설

질서위반행위 후 또는 과태료 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질서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부과되는 과태료가 더 가볍게 된 경우에는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(법 제3조).

19번

정답 ②

사법시험2차답안지, 교도관의 근무보고서 는 공개대상 정보, 회의록은 비공개대상 정보이다.

■ 청주시정보공개조례사건 →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청주시정보공개조례안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■

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, 청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의 실현을 그 근본

내용으로 하면서도 이로인한 개인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, 이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.[대판 1992.6.23, 92추17]

20번

정답 ③

해설

처분이므로 각하판결이 나오지는 아니한다. 하지만 취소하자있는 처분을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인용받지는 못하고 기각판결이 나오게 된다.